

귀농 · 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김정섭** ·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Prospect on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by Delphi Method

Jeongseop Kim · Jongin Ki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Abstract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is one of the most hot social issues in Korea.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ried to make up a policy program, which aims to support for the urban residents to get appropriate informations and to make right decisions about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For the sparsely populated rural communities, this phenomena are some good opportunities for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overnment needs the resasonale prospect on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because their policy program should be made on the basis sound data and information. But, with the current data about returning to farming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make an econometrical model that can forecast the population who will return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So, we tried a delphi method to sketch the future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village. The delphi panels gave us some prospects on the issues. They anticipated that the population of returning to farming will increase for the next five years. And, they recommended some policy directions.

Key words: returning to farming, migration

1. 서론

농촌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드러나는 한 가지 측면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 약화이며,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기된다(Flanigan & Sutherland, 2015; Bock, 2016). 한국의 농촌 문제도 이와 유사한 각도에서 진단되고 언급된다.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인적 자원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귀농 · 귀촌은 농촌의 인적 자원 부족 사태를 완화할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되기도 한다(김정섭 · 김종인, 2016:

115-116). 귀농인 혹은 귀촌인의 다양한 활동이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보고가 적지 않다(김정섭, 2014). 근년에 귀농 · 귀촌 문제가 주목받게 된 것은 도시-농촌 인구 이동 패턴이 크게 달라진 탓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도시에서 순유입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 방향이 역전되어 농촌 순유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김한중, 2016). 2010년에 도시(동)에서 농촌(읍 · 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향촌형 인구 이동’ 총량은 약 93만 명이었는데 ‘향도형 인구 이동’ 총량은 83만 명이였다(김정섭 · 임지은 · 박천수, 2012).

더불어 귀농 인수도 200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다. 근년에는

주요어: 귀농, 귀촌, 정책

* 이 논문은 2016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귀농 · 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 교신저자(김정섭) 전화: 061-820-2252 email: jskkjs@krei.re.kr

해마다 1만 가구를 웃돌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 이동, 즉 '귀촌 인구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해양수산부, 2016). 귀농 가구 수는 2011년에 6,541가구였던 것이 2012년에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넘었다. 그 이후 2015년까지 4년 연속 1만 가구 이상을 기록하였다.⁹⁾ 귀촌¹⁰⁾ 가구 수도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¹¹⁾ 이처럼 도시-농촌 인구 이동 양상이 변화한 결과,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농촌 지역의 총인구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2010년보다 76만 4,292명 더 많은 939만 1,680명이 되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2015년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²⁾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농, 귀어, 귀촌 등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핵심은 계획 제도의 틀 안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귀농어귀촌법'은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¹³⁾을 수립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했다.

귀농 문제에 있어 법률이 규정한 계획 제도에 따라 정책을 형성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인구에 관한 것이다. 향후 귀농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 혹은 감소할 것인지, 증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예상해야 한다.¹⁴⁾ 이는 정책 투입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식별하려고 시도하거나(우성호·이성근, 2015), 귀농·귀촌의 동기를 유형화하는(이민수·박덕병, 2012; Soresen, 1977; Halfacree & Rivera, 2012) 연구는 있었지만, 향후 귀농·귀촌 인구 증감을 계량적으로 전망하는 작업은 이루어진 바 없다.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변수를 토대로 견고한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관련 전문가들의 통찰과 몇몇 거시경제 변수에 의지해 추론하는 것이 최선일 듯하다.

이 글은 귀농·귀촌 인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그 추이를 전망하여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다.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발표된 통계 자료를 일별하면서 귀농·귀촌 인구 동향의 윤곽을 살펴본다. 둘째, 델파이 패널과 조사 문항 등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한다. 셋째, 향후 귀농·귀촌 인구 증감 추이에 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묻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넷째, 기존 귀농·귀촌 정책과 향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하여 델파이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귀농·귀촌 정책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종합한다.

2. 농촌 인구와 귀농·귀촌

가. 농업 인구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농촌에서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짓느냐'는 것만큼 절박한 물음도 없다. 2000년에 전국의 약 138만 농가 중에 20대 및 30대가 경영주인 청년 농가는 9만 1,516호로 6.6%였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5년에는 약 109만 농가 중에 청년 농가가 1만 4,366호였다. 그 비율이 1.3%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전체 농가 중에서 '영농 승계자가 있다'는 농가의 비율은 10% 미만이다(표 1). 2014년에 전국의 112만 776가구에 달하는 농가 중에서 영농 승계자를 둔 농가는 10만 9,528가구로 그 비율이 9.8%에 불과했다.

토박이 농가 집단에서 농가 재생산 가능성이 이처럼 낮기 때문에, 청년 귀농인은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후속 세대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김정섭, 2015). 청년들이 활발하게 귀농하여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해야 한다. 청년 농가를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과계 학교(특히, 한국농수산전문대학)를 졸업하고 창업한 가업 승계농(약 3,400명), 둘째, 농촌으로 이주하여 신규 취농한 청년 귀농자, 셋째, 농촌에서 거주하며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영농을 시작한 토박이 청년 신규취농자다.

청년 가업 승계농과 비교할 때, 청년 귀농자와 토박이 청년

9) 해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최근의 귀농 가구 수 추이는 다음과 같다. 6,541가구(2011년) → 11,220가구(2012년) → 10,923가구(2013년) → 11,144가구(2014년) → 11,959가구(2015년).

10) 이 통계에서 귀촌인이라 '1년 이상 동 지역에서 거주했다가 대상 기간 동안 읍·면으로 이동한 사람'을 뜻한다. 다만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일시적 이주, 귀농인·귀어인 및 그 동반 가구원은 제외한다(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해양수산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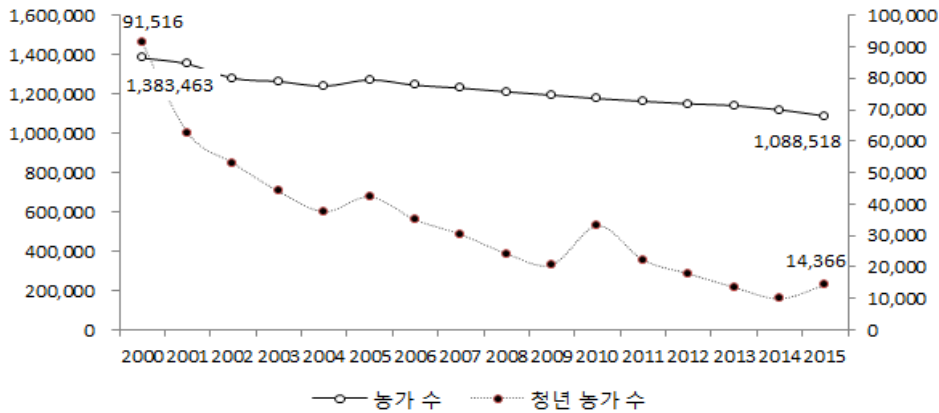
11) 귀촌 가구 수 추이는 다음과 같다. 28만 838가구(2013년) → 29만 9,357가구(2014년) → 31만 7,409가구(2015년).

12) 이하에서는 '귀농어귀촌법'이라고 줄여 쓴다.

13) 이하에서는 '종합계획'이라고 줄여 쓴다.

14) 사실상 귀촌 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 사업은 없는 상황이어서 델파이 조사에서는 '귀촌'을 제외하고 '귀농'에 한정하였다.

그림 1. 농가 및 청년 농가 수 감소 추세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http://kosis.kr).

표 1. 농가의 영농 승계자 확보 현황 (단위: 호, %)

연도	2011	2012	2013	2014
농가(A)	1,163,209	1,151,116	1,142,029	1,120,776
영농 승계자가 있는 농가(B)	114,396	103,039	112,487	109,528
비율(B/A)	9.8	9.0	9.8	9.8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http://kosis.kr).

신규 취농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이들은 ‘농업인 육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 앞에 진입장벽이 높다. 먼저 ‘영농 기술’ 측면의 진입장벽이 있다. 이들은 장기간의 집중적이고 실천적인 농업 교육훈련을 경험하지 않았다. ‘생계’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자영농으로 자립하기까지 초기 몇 년 동안 충분한 현금 소득을 얻기 어렵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자본으로는 자영

농으로 출발하기에 충분한 영농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년 귀농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청년 승계농 및 토박이 청년 취농자보다 지역사회 관계망에 편입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나. 농촌 인구와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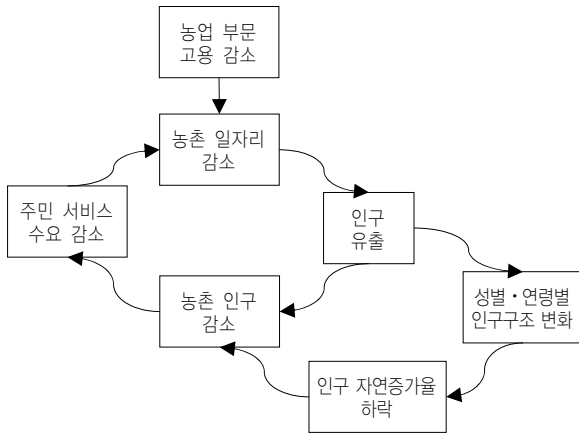
오랫동안 진행된 이촌탈농(移村脫農)의 결과, 농촌 인구는 감소했고 고령화되었다(표 2). 농업·농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인구 유입 없이 농촌에서 농업 인력이 유지되기는 어렵다. 더불어 농촌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수십 년 계속된 인구 감소는 농촌 지역에

표 2. 연도별 전국 및 농촌 인구 현황(내국인) (단위: 천 명)

		성별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국	성별	남자	18,749	20,228	21,771	22,357	23,068	23,466	23,841
		여자	18,658	20,192	21,619	22,196	22,917	23,576	24,150
	연령	유소년 인구*	12,656	12,095	11,134	10,236	9,639	8,986	7,787
		생산연령 인구**	23,305	26,575	30,094	31,678	32,973	33,690	34,779
		고령 인구***	1,446	1,750	2,162	2,641	3,372	4,365	5,425
	전체	37,407	40,420	43,390	44,554	45,985	47,041	47,991	
농촌	성별	남자	8,051	7,073	5,582	4,762	4,650	4,320	4,282
		여자	7,946	6,928	5,519	4,800	4,692	4,384	4,345
	연령	유소년 인구	5,708	4,260	2,623	1,929	1,742	1,495	1,286
		생산연령 인구	9,392	8,785	7,473	6,507	6,230	5,590	5,535
		고령 인구	897	957	1,004	1,126	1,370	1,618	1,806
	전체	15,997	14,002	11,100	9,562	9,343	8,704	8,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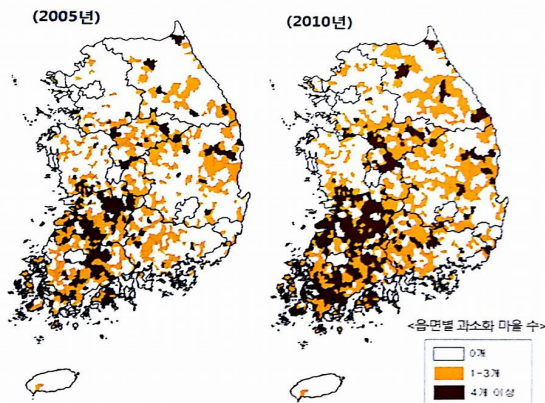
주: *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http://kosis.kr).

그림 2. 농촌의 인구 감소 메커니즘



자료: Hodge & Whitby(1981: 10).

그림 3. 읍·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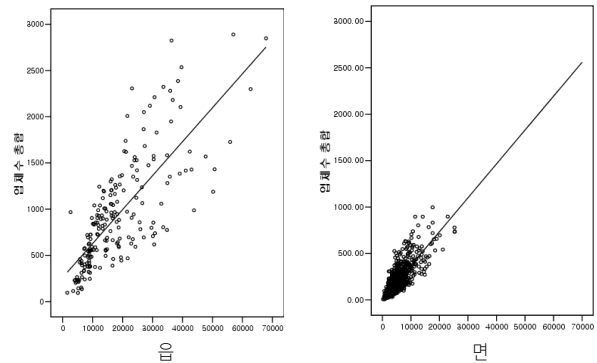


자료: 성주인 · 채종현(2012: 5).

‘인구학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와 연동하는 주민 삶의 질 하락의 악순환 구조 형성’이라는 두 종류의 효과를 낳았다(김정섭 · 엄진영 · 유찬희, 2016: 354). 처음에는 농업 부문에서 시작된 농촌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조가 바뀌었다. 농촌의 인구 자연 증가율이 낮아졌다. 이는 다시 농촌 인구 감소를 심화시켰다. 인구가 줄면서 주민의 생활 서비스 수요가 감소했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심지어 농촌 마을이 소멸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지역 공동체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넘어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 주장이다. 2010년 기준으로 거주 가구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 수는 총 3,091개로 전체 농촌 마을(3만

그림 4. 읍·면 인구와 3차산업 사업체 수의 상관관계



6,496개)의 8.5%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5년의 2,048개가 5년 사이에 1,000개 이상 증가한 결과다(성주인 · 채종현, 2012: 4).¹⁵⁾ 2005년에는 과소화 마을이 한 개 이상 있는 읍·면이 전체의 47%인 661개였는데, 2010년에는 63%인 884개 읍·면에 과소화 마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성주인 · 채종현, 2012: 4).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민 일상생활과 관계있는 서비스업 부문 사업체 및 취업자 수도 더불어 줄고 있다. 이는 ‘삶의 질’ 측면에서 농촌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특히 면 지역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읍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2000년 무렵에 “인구와 도소매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부문 사업체 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읍보다 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읍부의 경우 그 상관계수가 0.764였는데, 면부에서는 그보다 상당히 높은 0.823이었다(그림 4).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체 수 감소 가능성이 읍보다 면에서 더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특정 종류의 기초 생활 서비스를 인접한 읍에까지 가서 제공받아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채종현 · 박주영 · 김정섭, 2007: 114). 2000년대를 관통하면서 농촌 읍·면 중심지의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이 쇠락한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에서는 1998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읍·면 지역에서 ‘병의원’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 서비스 제공 업체 수가 감소했음이 드러난다(송미령 · 김정섭 · 박주영, 2009).

다. 도시-농촌 인구 이동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 양상은 압축 성장 혹은 근대화 과정을 통틀어 일관된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반전(反轉)하였다(표 4). 도시에서 인구 순유입이 2006년까지 계속되

15) 여기서 마을이란 행정리를 뜻한다. ‘과소화 마을’이란 거주 가구가 20호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든 마을을 뜻한다.

표 3. 읍·면 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변화

사업체 종류	1998년		2008년		증감율 '98~'08	
	읍면 평균	합계	읍면평균	합계		
공공 서비스	초등학교	1,2	1711	0.8	1,116	-34.8%
	중학교	0,6	858	0.8	643	-25.1%
	고등학교	0,4	517	0.2	313	-39.5%
	치안행정기관	1,1	1565	1,1	1,616	3.3%
	소방서	0,6	809	0,6	821	1.5%
	우체국	0,7	1001	0,8	1,195	19.4%
	보건소	0,6	899	0,6	803	-10.7%
	유치원	0,4	584	0,5	690	18.2%
상업적 서비스	버스터미널	0,4	549	0,2	318	-42.1%
	상점	6,6	9,332	4,1	5,768	-38.2%
	금융기관 (우체국 제외)	2,6	3,653	1,7	2,448	-33.0%
	세탁소	1,3	1,874	1,2	1,630	-13.0%
	음식점	26,4	37,525	23,1	32,829	-12.5%
	주점	5,2	7,387	3,4	4,836	-34.5%
	이·미용실	5,1	7,256	4,1	5,776	-20.4%
	목욕탕	0,5	698	0,5	645	-7.6%
	찻집	6,4	9,075	3,6	5,066	-44.2%
	치과의원	0,4	584	0,4	570	-2.4%
	약국	1,6	2,234	1,3	1,847	-17.3%
	병의원	2,3	3,273	2,6	3,699	13.0%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제외)	2,3	1,498	2,3	1,198	-20.0%
	학원	3,1	4,450	2,7	3,807	-14.4%
	문화여가시설	0,1	161	0,1	114	-29.2%
	총계	67,3	95,523	52,0	76,518	-22.7%

자료: 전국 전화번호부 사업체편, 각 연도. 송미령 외(2009)에서 수정, 인용.
 주) 읍·면사무소가 소재한 행정리를 중심지라고 잠정 정의하였다. 서비스 공급량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 4.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 추이

(단위: 명)

연도	농촌→도시(A)	도시→농촌(B)	농촌으로의	인구 순유입(B-A)		
				수도권	지방 대도시	중소도시
2006	458,524	442,086	-16,438	-12,041	-831	-3,566
2007	462,431	472,048	9,617	1,967	9,108	-1,458
2008	448,485	447,375	-1,110	2,600	11,764	-15,474
2009	424,857	439,318	14,461	7,129	14,533	-7,201
2010	410,491	424,256	13,765	11,494	13,646	-11,375
2011	393,106	416,695	23,589	20,438	9,868	-6,717
2012	359,841	378,085	18,244	15,661	9,843	-7,260
2013	339,089	372,161	33,072	15,315	16,406	1,351
2014	335,593	367,677	32,084	16,159	15,659	266
2015	333,773	375,073	41,300	21,589	19,334	377

자료: 김한중(2016).
 주 1) 시(市) 이상은 도시로, 군(郡) 이하는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도농통합시의 읍·면은 도시에 포함되어 있다.
 2) ‘-’는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는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뜻한다.

표 5. 도시와 농촌 사이의 연령대별 순이동 추이

(단위: 명)

구분	10세 미만	1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합계
2001	745	-7,511	-43,025	-1,907	6,799	6,486	1,274	-1,765	-38,904
2002	-19,241	-16,714	-55,656	-15,997	1,252	3,073	-374	-2,655	-106,312
2003	-5,194	-9,457	-43,688	-12,628	3,502	3,903	-1,177	-3,255	-67,994
2004	-13,102	-12,390	-41,828	-11,299	2,971	3,779	-599	-4,269	-76,737
2005	-10,674	-6,957	-33,533	-8,155	6,730	6,825	1,023	-3,396	-48,137
2006	-3,121	-3,217	-24,828	828	8,649	7,899	1,083	-3,731	-16,438
2007	-329	1,366	-18,554	2,996	11,662	10,334	3,123	-981	9,617
2008	-3,921	-3,033	-20,191	2,110	10,406	11,124	4,695	-2,300	-1,110
2009	-2,313	136	-12,793	3,610	10,471	11,077	5,422	-1,149	14,461
2010	-1,382	1,629	-14,469	2,082	10,531	11,078	5,073	-777	13,765
2011	523	2,501	-13,273	2,183	11,419	14,215	6,522	-501	23,589
2012	-409	145	-13,294	3,145	8,461	13,292	6,600	304	18,244
2013	1,524	1,686	-9,046	5,266	9,762	16,027	7,822	31	33,072
2014	633	2,367	-8,383	3,263	10,059	15,747	7,812	586	32,084
2015	1,884	2,490	-5,875	5,355	9,316	17,452	10,185	493	41,300

자료: 김한중(2016).

주: '-' 는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 는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뜻한다.

표 6. 농촌 인구 추계

(단위: 천 명)

구분	2008	2018	2028	2038	2048	2053
농촌(A)	9,320	9,516	9,377	9,266	8,704	8,510
읍	4,141	4,747	5,110	5,478	5,615	5,691
면	5,179	4,769	4,267	3,788	3,089	2,819
전국(B)	48,948	51,140	52,131	51,470	48,841	46,951
농촌 인구 비율(A/B)	19.0%	18.6%	18.0%	18.0%	17.8%	18.1%

자료: 성주인 외(2014: 95-96).

주) 성주인 외(2014)는 농촌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가를 기준으로 상, 중, 하의 세 종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코호트 기법을 활용해 농촌 인구를 추산했다. 이 표에서 인용한 수치는 중위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치다.

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농촌에서 인구 순유입이 일어났다. 2009년부터는 농촌 인구 순유입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출발지로 하는 농촌 인구 순유입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2013년 이후로는 작은 규모지만 중소도시를 출발지로 하는 농촌 인구 순유입도 계속되고 있다(김한중, 2016). '2011년에 인구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아졌다(통계청, 2012)는 소식도 이 같은 인구 이동 양상 변화가 지속성을 얻기 시작했음을 방증한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봐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2009년 무렵부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농촌 인구 순유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농촌 인구 순유입이 계속되었다.

농촌 인구 순유입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 총량은 연간 수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 추세가 역전될 만큼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출생률,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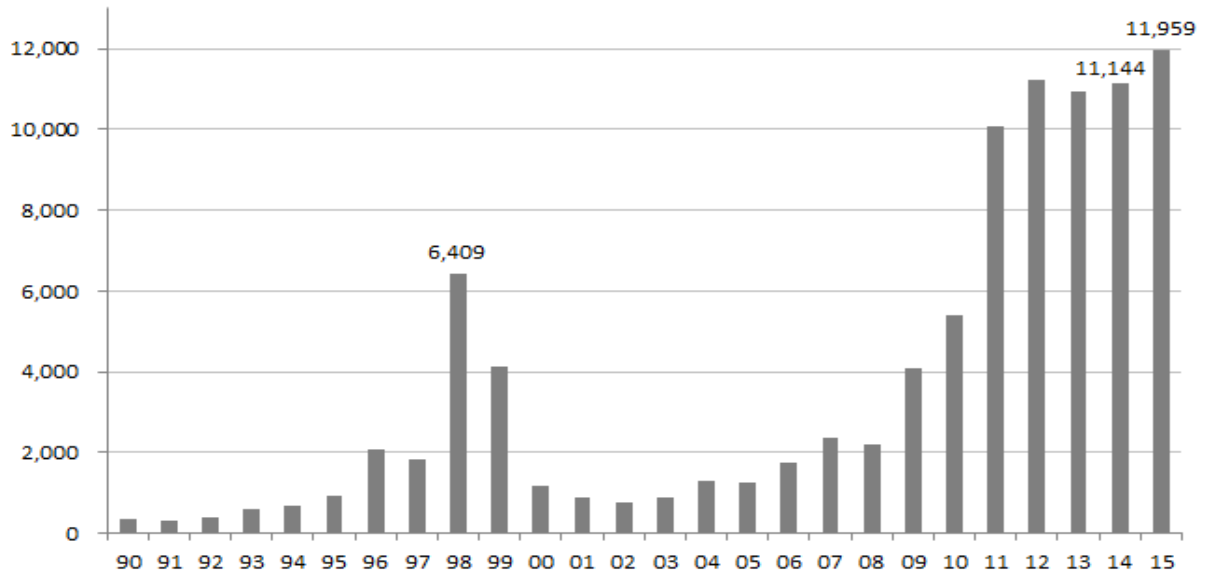
비, 사망률 등의 요인이 농촌 인구 규모에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농촌 인구 순유입이 반영된 인구 이동률을 고려하여 코호트 분석을 실시한 농촌 인구 장기 추계 연구(표 6)에서는 2018년까지는 현재 약 930만 명에 근접한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당한 폭으로 감소해 2053년경에는 약 8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성주인 외, 2014: 90).

라. 귀농 인구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만 가구 넘게 귀농했다. 2015년에 귀농 가구는 1만 1,959가구였다.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귀농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았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8년에 귀농 인구가 일시 급증한 적이 있는데 2년 뒤인 2000년에 예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2008년 이후 급증하기 시

그림 5. 귀농 가구 수 추이(1990년~2015년)

(단위: 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www.kosis.kr), 농림수산물부(2012), 농림부(2006), 농림부(1997), 고성준(2008), 서규선·변재면(2000).

주1: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수치는 농림부(1997)의 자료다. 서규선·변재면(2000)에서 재인용하였다.

주2: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치는 농림부(2006)의 자료다. 고성준(2008)에서 재인용하였다.

주3: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치는 농림부(2012)의 자료다.

주4: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치는 통계청 KOSIS의 자료다.

주5: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귀농 가구 수는 농림수산물부의 행정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동일한 조사 방법이 적용되었다. 2012년부터는 통계청이 귀농 가구 수를 집계하였는데, 행정 조사를 하지 않고 간접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수치다.

표 7. 귀농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405	10,075	11,220	10,923	11,144	12,114
30대 이하	761(14.1%)	1,202(11.9%)	1,292(11.5%)	1,253(11.5%)	1,197(10.7%)	1,168(9.6%)
40대	1,481(27.4%)	2,555(25.4%)	2,766(24.7%)	2,510(23.0%)	2,501(22.4%)	2,428(20.0%)
50대	1,854(34.3%)	3,764(37.4%)	4,298(38.3%)	4,289(39.3%)	4,409(39.6%)	4,875(40.2%)
60대	1,054(19.7%)	2,007(19.9%)	2,195(19.6%)	2,288(20.9%)	2,383(21.4%)	2,954(24.4%)
70대 이상	255(4.7%)	547(5.4%)	669(6.0%)	583(5.3%)	654(5.9%)	689(5.7%)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각 연도.

주) 괄호 안의 비율은 당해 전체 귀농 가구주 중에서 해당 연령대의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

표 8. 귀농 가구원 연령 분포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9,597	17,464	19,657	18,825	18,864	19,860
30대 이하	3,260(34.0%)	5,339(30.6%)	5,830(29.7%)	5,337(28.4%)	5,219(27.7%)	5,108(25.7%)
40대	2,043(21.3%)	3,488(20.0%)	3,825(19.5%)	3,444(18.3%)	3,407(18.1%)	3,246(16.3%)
50대	2,526(26.3%)	5,159(29.5%)	5,999(30.5%)	6,017(32.0%)	6,009(31.9%)	6,572(33.1%)
60대	1,332(13.9%)	2,582(14.8%)	2,940(15.0%)	3,038(16.1%)	3,160(16.8%)	3,846(19.4%)
70대 이상	436(4.5%)	896(5.1%)	1,063(5.4%)	989(5.3%)	1,069(5.7%)	1,088(5.5%)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각 연도.

주) 괄호 안의 비율은 당해 전체 귀농 가구원 중에서 해당 연령대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에는 귀농 가구주도 포함된다.

작해 2011년부터는 1만 가구 이상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증했다 (그림 5).

귀농 인구 집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50대 다(표 3-7). 2015년 귀농 가구주 가운데 50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2%였다. 그 다음으로는 60대(24.4%), 40대(20.0%), 30대 이하(9.6%), 70대 이상(5.7%)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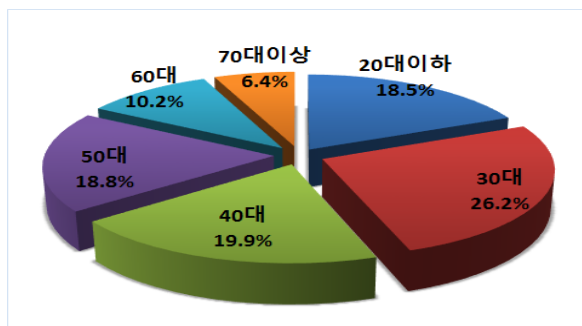
최근 5년 동안 귀농 가구 집단의 평균 연령은 약간 상승하였다. 귀농 가구 집단에서 50대 및 60대 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했다. 2011년에 50대 귀농 가구주 비율은 37.4%였는데 2015년에는 40.2%가 되었고, 60대 귀농 가구주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에 19.9%에서 24.4%로 높아졌다(표 7). 한편, 40대 이하 연령층 비율은 조금씩 낮아졌다. 40대 귀농 가구주 비율과 30대 이하 귀농 가구주 비율은 2011년에 각각 25.4%와 11.9%였는데, 2015년에는 20.0%와 9.6%였다. 30대 이하 연령층의 귀농 가구주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연령대 귀농 가구에서 동반 이주하는 가구원 수가 다른 연령대의 귀농 가구에 비해 훨씬 더 많다. 가구주와 가구원을 모두 포함한 '귀농 가구원'의 연령 분포에서는 30대 이하 연령 집단의 비율이 25.7%를 차지한다(표 8).

마. 귀촌 인구

정부 발표¹⁶⁾에 따르면, 귀촌 가구는 2015년에 31만 7,409가구로 2014년보다 1만 8,052가구 증가했다(6.0% 증가). 귀촌 가구원 수는 46만 6,778명이었다. 2014년보다 2만 7,243명 더 많았다.

귀촌 가구주 연령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30대이다. 전체의 26.2%를 차지한다(그림 6). 그 다음으로 40대(19.9%), 50대(18.8%) 등의 순이었다. 귀촌 가구의 대부분은 2인 이하 가구다. 이들이 전체의 88.2%를 차지한다. 1인 가구가 70.3%, 2인 가구가 17.9%이다. 귀촌인 46만 6,778명 중 남성이 24만 5,034명으로 52.5%를 차지한다.

그림 6. 귀촌 가구주 연령 분포



3. 연구방법

가. 조사 대상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 10명, 공공기관의 공무원이거나 준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5명,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5명, 언론인 1명, 농업인단체 활동가 1명으로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세 차례의 설문으로 구성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활동가, 귀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향후 귀농 인구 증감 추세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은 델파이 조사였다. 1차 조사에서는 패널들에게 현재까지의 귀농 가구 수 추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2021년경의 귀농 가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를 전망하게 하였다. 그 같은 전망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요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가운데, 귀농 가구 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예상하는 영향력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귀농 가구 수 전망치를 수정하게 하였다. 이때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요인에 관련된 공인된 통계자료들을 함께 제공하였다. 아울러 향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귀농·귀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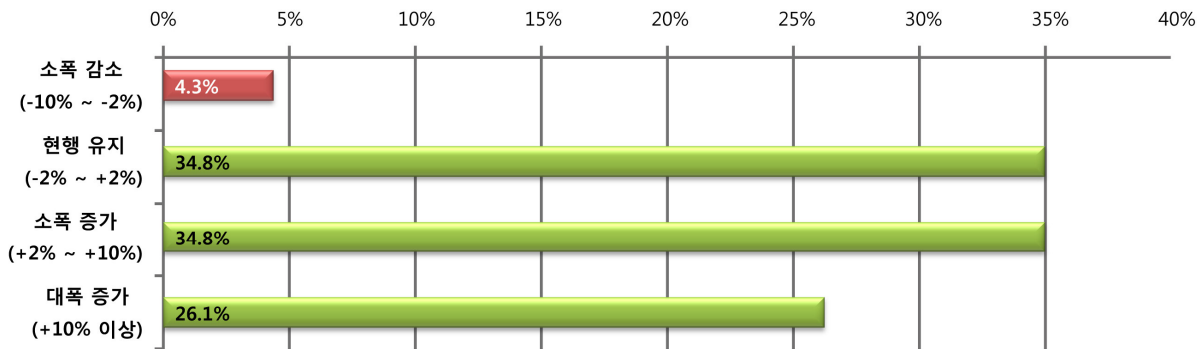
3차 조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 자료와 2차 조사에서 패널들이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를 나열하고 각각의 '정책 및 정책 아이디어'에 관해 '원안대로 유지(도입)', '개선하여 유지(도입)', '폐지(불필요)'의 세 범주로 나누어 의견을 표시하게 하였다.

4. 귀농 인구 전망 및 영향 요인

관련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 등이 5년 뒤인 2021년의 귀농 인구 추이를 전망한 결과, 현재와 비슷하거나 현재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그림 7).

16) 농림축산식품부 외(2016)를 참고.

그림 7. 2021년 귀농 인구 전망



연간 증가율이 ‘현행 유지(-2.0%~2.0%미만)’와 ‘소폭 증가(2.0%~10.0%)’일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34.8%로 가장 많았다. 대폭 증가(10.0%이상)도 26.1%에 달했고, 소폭 감소(-10.0%~2.0%) 의견은 4.3%로 소수였다.

델파이 응답자들이 그 같은 전망의 근거로 제시한 경제적·사

회적 요인은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도시 지역의 일자리 상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농 관련 정책’, ‘토지 및 자본’, ‘귀농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었다(표 9). 거론된 각각의 요인에 대해, 응답자마다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귀농 인구 추이에 관한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 9. 귀농 인구 증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요인	귀농 인구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	귀농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
은퇴 연령 집단 인구 증가	* 베이비 붐 세대 이후의 연령 집단은 농업·농촌에 대한 경험이 적어 장기적으로는 귀농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1년경에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거의 끝난다. (3/22)	*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한 후 귀농할 가능성이 높다. (12/22)
도시 지역 일자리 상황	* 향후 도시 지역의 경제가 회복될 경우, 도시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귀농 인구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22)	* 경제성장률이 정체되어 향후 도시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0/22) *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발생하는 실직자들이 귀농할 가능성이 있다. (4/22)
농업에 대한 전망	*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농업소득이 감소했다. (8/22)	* 유기농산물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져서 농산물 판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1/22)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포함한 농촌 지역의 집합적 활동(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등)이 활발해지고 농산물 가공·유통 부문이 성장하여 인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5/2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 귀농 실패 사례가 언론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어 중앙정부는 귀농보다는 귀촌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2/22) *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농민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가 귀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1/22)	* ‘귀농어귀촌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귀농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7/22) *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려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서 지자체가 귀농을 더욱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 (5/22)
토지, 자본	* 현재도 일정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 (3/22) * 귀농인이 늘고 있는데 농지 총량은 정해져 있어 경합이 심화되고 지가가 상승한다. (3/22)	* 농촌이 고령화되어 임대 농지가 늘거나 매물이 늘어날 것이다. (1/22)
귀농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여전히 농업은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 (3/22) * 특히 젊은 세대가 농촌에 살 경우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1/22)	* 귀농·귀촌에 대한 언론보도 증가로 우호적인 인식이 늘고 있다. (6/22) * 귀농자들의 성공 경험담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피드백 과정이 왕성해질 수 있다. (4/22) * 도시에서 도시농업, 텃밭, 주말농장 등을 통해 농업을 접하는 기회가 늘었다. (2/22)
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기초 생활·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다. (6/22) * 토박이 주민의 뒷세가 세다는 인식과 귀농인이 농촌의 사회적 관계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다. (3/22)	*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2/22) * 생태적·친환경적 삶에 대한 동경이 커지고 있다. (9/22) * 공동체적 삶에 대한 동경, 고향에 대한 향수가 커지고 있다. (2/22) * 교통이 발달해 도시-농촌 간 이동 시간이 줄었고, 심리적 거리감이 줄었다. (3/22)

자료: 귀농 인구 전망 및 정책 방향에 관한 델파이 조사 결과.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델파이 패널 가운데 해당 의견을 제시한 패널의 수다.

표 10. 은퇴 연령층 인구 추계(55~65세)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5세	865,245	866,875	849,677	833,156	826,375
56세	842,538	863,804	865,536	848,453	832,028
57세	806,668	840,858	862,206	864,044	847,066
58세	770,514	804,739	838,979	860,408	862,339
59세	733,532	768,352	802,588	836,873	858,363
60세	694,429	731,092	765,907	800,198	834,501
61세	648,822	691,774	728,433	763,258	797,549
62세	586,311	646,021	688,918	725,556	760,362
63세	530,620	583,467	643,021	685,840	722,428
64세	495,325	527,723	580,414	639,784	682,494
65세	466,007	492,265	524,577	577,088	636,231
소계	7,440,011	7,816,940	8,150,256	8,434,658	8,659,73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 인구 추계.

표 11. 취업자 수 변화

(단위: 만 명)

연령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취업자 증감	14.5	-7.2	32.3	41.5	43.7	38.6	53.3	33.7
- 서비스업	26	17.9	20	38.6	41.6	31.7	42.6	25
- 제조업	-5.2	-12.6	19.1	6.3	1.4	7.9	14.6	1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2.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추이

(단위: 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회적 기업	30	12	40	22	31	66	82
협동조합	-	-	-	-	9	557	594
마을기업	-	-	94	156	153	241	107

자료: 김정섭 외(2015).

과 같다. 다수의 전문가가 2021년에는 베이비 붐 세대가 58~66세가 되므로 이들이 퇴직하면서 귀농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평균 퇴직 연령이 52.6세(2014년 통계청 조사)이므로 2021년이 되기 전에 베이비 붐 세대 대부분이 퇴직할 것이므로 그 시점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귀농 인구 증가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최근 3개년의 귀농 가구원 중에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40대의 비율도 낮지 않아 귀농이 급격히 줄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¹⁷⁾ 베이비 붐 세대 인구는 2017년에 약 706만 명이 될 것이다. 이후 점차 줄어들지만 2021년에도 698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표 10).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한 은퇴 연령층(55~65세) 인구 규모는 2016년에 744만 명에서 2021년에 866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 인구가

줄어도 귀농 인구 증가 추세를 둔화시킬 만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도시 지역 일자리와 귀농 인구의 상관관계에 관한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추세여서 도시 일자리 수가 감소할 텐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산업 구조 조정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귀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¹⁸⁾ 2008~2015년 사이에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하였다. 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표 11).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가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델파이 패널들은 농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귀농 인구 증감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농업소득이 줄고 있어 귀농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장래인구추계'를 참고.

18)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1년에 전년 대비 2.8%p 하락하며 3%대에 진입한 이후 4년 연속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저성장 기조 장기화가 우려된다. 특히 청년층(20-29세)의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20-29세) 실업률: ('08)7.0% → ('10)7.8% → ('12)7.5% → ('14)9.0% → ('15)9.1%.

표 13. 귀농 관련 신문 보도 건수

(단위: 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종합일간지	239	419	403	413	626	631	720	889
지역 종합일간지	947	1,801	1,852	2,224	3,589	4,226	3,753	4,154
계	1,186	2,220	2,255	2,637	4,215	4,857	4,473	5,043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www.bigkinds.or.kr).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평균 농업소득은 2007년에 1,000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진 이후 계속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하락 추세라고도 볼 수 있다.¹⁹⁾

최근에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6차산업화 등의 집합적 활동(collective action)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조직을 구성하거나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을 형성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인력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귀농을 촉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2015년에 '귀농어귀촌법'이 제정되어 중앙정부가 귀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토대가 마련되었고, 농촌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려고 귀농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귀농 실패 사례 등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정부는 귀농보다는 귀촌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일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자보다는 기존 농민 중심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도 있었다. 지역의 토박이 농업인들이 귀농인들과의 여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렇다는 예상이다.

일정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 그런데 귀농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지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농지 가격 상승이 귀농 인구 증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자 다수가 전망하였다. 장민기 외(2014)에 따르면, 귀농·귀촌 준비 자금이 평균 1억 2,364만 원에 달한다. 2013년 기준 귀농인들의 평균 경작면적 수준의 농지를 확보하려면 경기(0.45ha, 3억 7,986만 원), 충북(0.42ha, 7,553만 원), 경북(0.48ha, 6,180만 원) 등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장민기 외, 2014). 귀농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전국 농림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연평균 0.95%로 직전 3개년(2008~2010년)의 상승률인 0.80%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통계청, 전국지가변동률조사).²⁰⁾ 한편,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지 임대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귀농자가 농지를 얻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²¹⁾

귀농에 대한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신문방송 보도 건수가 증가하면서 우호적인 인식이 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국 및 지역 종합일간지에 나온 귀농 관련 신문 보도 건수는 2008년에 1,186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5,043건으로 다섯 배 가까이 증가했다(표 3-13). 언론방송의 관심 증대가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듯하다. 그 밖에도 도시농업이나 주말농장 등의 실천이 확산되면서 도시민이 농업을 접할 기회가 늘어난 것도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설문 조사²²⁾에 따르면 주말농장 체험 후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 비율이 98%에 달했으며, 귀농·귀촌 계획에 도움이 됐다는 비율도 9.5%였다(농촌진흥청, 2016).

텔레비전 패널 다수가 인구 밀집으로 인한 환경 오염, 교통 혼잡 등의 도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한편,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등 사회 변화가 귀농 인구 증가를 촉진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심리적 거리감이 약화된 것도 귀농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공동체적 삶에 대한 동경,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귀농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농촌 지역사회에 상대적으로 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적 특성 때문에 농촌의 사회적 관계에 편입되는 데에 귀농인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5. 귀농 정책 방향

텔레비전 패널들은 현행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신규 정책

19) 농업소득 평균: ('07)1041만 원 → ('09)970만 원 → ('11)875만 원 → ('13)1004만 원 → ('14)1030만 원.

2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참고.

21) 임차농지비율: ('04)42.3% → ('07)42.8% → ('10)47.9% → ('13)50.0% → ('14)49.9%.

22) 서울·양평 지역 주말농장에 참여한 시민 240명 대상, 2015년 7~8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다. 농촌진흥청(2016)을 참고.

과제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관한 의견

실행 중인 귀농·귀촌 정책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단,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개선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사업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46.7%).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에 대해서도 폐지 의견이 일부 있었다(20.0%). 이 외에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13.3%)’과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6.7%)’을 폐지 대상으로 지적한 의견도 있었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 사업별 의견 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도시민 대상 관심 단계 교육에 집중해야

표 14. 귀농·귀촌 정책 사업 지속 필요 여부 조사 결과 (단위: %)

단계	구분	사업 지속 필요 여부		
		유지	개선	폐지
관심	귀농귀촌 종합센터	26.7	73.3	0.0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26.7	53.3	20.0
	귀농귀촌 교육(농정원)	33.3	66.7	0.0
실행	도시민농촌유치지원	20.0	66.7	13.3
	귀농인의 집	46.7	53.3	0.0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13.3	40.0	46.7
정책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26.7	66.7	6.7
	귀농인실습지원(농진청)	40.0	60.0	0.0

표 15. 귀농·귀촌 정책 사업 개선 의견

단계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종합 의견)
관심	귀농귀촌 종합센터	예산 확대(6), 도시민 대상 관심단계 교육에 집중, 유관 기관 및 지자체 통합상담 운영체계 마련, 조직 확대, 전담운영자 역량 강화, 초기 의향 단계 도시민 대상 장기 교육 프로그램 강화, 수도권 현장 실습지 확보, 체재형 숙박 교육,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업, 추후 진행 단계 점검.
	귀농·귀촌 교육(농정원)	광역 단위별 소규모 박람회 필요, 수행 기관 전문화, 상담 위주로 변경, 비용 대비 효과 의문, 형식적인 행사로 변질,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
실행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예산 확대(2), 도별 거점 교육기관 선정, 귀농·귀촌 교육 표준화, 귀농·귀촌 전문 교육기관 양성,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과 중복되는 교육사업 통합 및 연계 필요(2), 2~3년 계속 사업 도입, 민간 제안 교육 프로그램 확대(2), 교육 대상자 확대, 지자체로 이관, 강사진 자질 심사.
	귀농인의 집	예산 확대(4), 개소 수 증설, 관리 실태 점검·보완 강화, 마을 빈집 수리와 연계하여 계속 확대(3), 장기 임대 등 유형 다양화.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예산 확대(3), 개소 수 확대, 지역의 유희시설 등을 활용(2), 소규모 유형도 인정, 기존 귀농·귀촌 관련 조직 및 마을만들기·6차산업 등의 사업과 연계, 지자체의 운영 역량 부족.
정책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예산 확대(2), 소액 보조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 농신보 기준 완화, 사업명을 지원 사업에서 융자 사업으로 바꿀 필요(2), 금리 인하, 사후 관리 강화, 금리 차등 적용, 젊은 세대 지원 확대, 주택 형태에 따른 차등 지원, 상환 현황에 대한 조사.
	귀농인 실습지원(농진청)	모니터링 강화(4), 지급 금액 높이고 창업 불이행 시 환수 규정 신설, 여러 농가가 결합하여 교육하는 유형도 인정, 전국 선도 농가 DB화, 선도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 한 작기를 경험하도록 교육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연장.

한다. 도시민 대상 장기 교육 프로그램(숙박형 포함)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상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귀농·귀촌 창업박람회는 형식적인 행사로 치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보 제공 기능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박람회는 맞춤형 상담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서울에서만 개최되고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박람회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가 시급하다.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메뉴얼화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예산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3년 단위 사업이 아니라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속 사업으로 개편하는 게 어려울 경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타격이 크므로 점차적으로 지원금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농인의 집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단기 임대 형태만 있으나 장기 임대 유형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조성 사업의 투입 예산 대비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이 많다.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의 사업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한 후 정책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단, 창업 자금의 경우 상환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융자 상환을 재조정하는 등 사업의 세부 내용이나 시행 방식을 개선해야 할 수도 있다.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의 현재 지원 수준은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 대신에 실습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교육 이수 후 창업 불이행 시 지원 금액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무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농산물의 특성상 일년의 작기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신규 정책 제안에 관한 의견

농촌 이주 초기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델파이 패널 대다수가 도입에 찬성하였다. 단, 소수 의견으로, 귀농자와 귀촌자의 성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최소한 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박이 지역 주민 대상 귀농·귀촌 이해 교육 사업 역시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 등 농업인 대상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역사회 공동사업 발굴 사업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 취지에 동감하였다. 다만, 일부는 사업을 선정할 때 단순히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공개 발표 등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사업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의 경우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대 및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규 제안 사업인 ‘농촌 이주 초기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교육’ 및 ‘토박이 지역 주민 대상 귀농·귀촌 이해교육’을 실시한 마을에 한정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표 16. 귀농·귀촌 관련 신규 제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도입 필요 여부		
		원안대로 도입	개선하여 도입	불필요
농촌 이주 초기 귀농·귀촌인 지역사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지역사회 관련 정보 교육 • 예비 귀농·귀촌 단계에서 소양 교육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주 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 기초 지자체별로 귀농·귀촌을 포함한 농업·농촌 관련 정책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련 교육 필요 	73.3	20.0	6.7
토박이 주민 대상귀농귀촌 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실상을 알려 특혜 부여라는 오해 불식 ○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특성 및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의 효과적 정착 위한 방안 모색 	46.7	40.0	13.3
지역사회 공동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과 토박이 주민이 협력하는 ‘상생창업 아이디어 발굴 콘테스트’ (전문가 심사 및 컨설팅을 통해 창업자금 지원) • 마을 주품목 가공+유통+체험관광+교육 등 6차산업화 아이디어 • 지역민 참여 농촌 공동체회사·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마을공동식당, 카페, 도서관 등) • 지역사회기반 복지서비스 사업(자녀교육, 노인복지, 문화 서비스 등) 	53.3	40.0	6.7
귀촌인 지역 문화·복지 고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단위 귀촌인 풀(pool)을 구축하고 일자리 소개·알선 서비스(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기본 기능으로 설정) •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구인정보 관리 • 귀촌인의 전직 현황을 파악, 적재적소 연계 	66.7	33.3	0.0
귀촌인 6차 산업 창업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촌 1년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6차산업 투자설명회·교육 • 6차산업 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기술이전 협력 	46.7	20.0	33.3
청년 창업농 교육농장 설치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초기 젊은 귀농인 포함, 청년 신규취농자 종합지원·육성 • 생계, 농업교육훈련, 영농기반 등 청년 신규취농 3대 난점 해소 - 창업농 교육 농장에서 2년간 장기 농업연수 시행 - 연수기간 동안 생활 급여와 전문 교육훈련 제공 - 연수생(신규취농 준비자)은 성실근로와 교육훈련 이수 의무 - 연수 종료 시 농업창업계획 심사 후 영농기반 지원 - 지역의 역량 있는 농업법인, 농업인 지도자 등에게 교육농장 운영 및 연수 시행을 위탁 	80.0	13.3	6.7
소규모 공영 임대주택 단지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주택 공급 • 읍·면 소재지 연접 마을에 단지 조성 • 임대 주택 관리 등의 사무를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위임하거나, 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 -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입주자가 주택을 직접 건축해야 하므로 젊은 귀농·귀촌인은 접근하기 어렵고, LH공사 등의 국민임대주택은 수요가 적은 농촌 지역에 건축할 경제성이 없음 	66.7	20.0	13.3

귀촌인 지역 문화·복지 고용 서비스 사업의 도입 필요성에 모든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다만 귀촌인에 한정하지 말고 귀농인도 포함해 추진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단독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게 아니라 귀농·귀촌 지원 업무와 사회적 경제(일자리)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이 관여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귀촌인 6차산업 창업교육·컨설팅 사업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33.3%). 6차산업화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창업을 하는 사람이 귀촌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 사업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귀촌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귀촌인에 대한 특혜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년 창업농 교육농장 설치 및 연수 사업의 필요성에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공감하였다.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농장·농업법인이 실무를 충분히 준비하는 동시에 교육훈련에 대한 의지가 투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정도를 먼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일부 응답자는 기존의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농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사업'과 같이 하드웨어 설치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소규모 공영 임대주택 단지 조성·운영 사업은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건물을 신축해야 하므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농촌 지역의 빈집을 귀농·귀촌인에게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법·제도 측면에서 여건을 갖춘 후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으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6. 결론

귀농·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은 무엇보다 농업 및 농촌 인구 유지 차원에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우선, 농가 내부에서 출생한 가구원이 영농을 승계하는 방식의 농업 인구 재생산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한국 농업 현실에서 귀농은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준다. 귀촌을 포함하여 농촌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구 과소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계기일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일자리 및 생활 서비스 감소가 연동하는 악순환 구조가 현재의 농촌 상황이다. 근래의 도시-농촌 인구 이동 양상 변화가 그 같은 악순환 구조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동력으로 작용케 하려면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귀농·귀촌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도 중요하다. 귀농·귀촌 통계를 작성한 지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귀농·귀촌 인구 증감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및 사회문화 변인이 명백하게 해명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확률 모형이나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시점의 귀농·귀촌 인구 규모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과 귀농·귀촌 현상의 배경에서 두드러지는 거시적 변인을 가지고 개연성 있게 추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델파이를 실시한 결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향후 5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는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와 비슷하거나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수렴된다. 이는 귀농·귀촌 정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자원(예: 정부 예산)과 인적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임을 뜻한다.

몇 년 전에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였다. 귀농·귀촌 인구 증감에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목적합리성을 결여한 목표 설정이었다. 설령 정부가 귀농·귀촌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권장하느냐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알더라도, '귀농·귀촌 촉진'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한 가라는 문제도 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인해 농촌에 여러 모로 활력이 일어날 개연성은 있지만,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귀농·귀촌 정책의 공식적 추진 방향은 '촉진'에서 '정착 지원'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2013년 귀농귀촌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종전의 농촌 유입 촉진 위주에서 귀농귀촌인의 안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작년에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도 그 같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귀농과 관련된 법률이 발의되던 입법 논의 초기에는 '귀농 촉진'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것이, '귀농어·귀촌법'에서는 탈색되어 법률이 명시하는 목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법률의 목적에서 '인구 유입 촉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귀

촌인'도 포함하는 우회적인 접근이 표명되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귀농 정책의 방향에 대한 비판이, 즉 '귀농에 대한 정부 정책 개입은 귀농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귀농인의 정착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김정섭, 2015: 56).

귀농·귀촌 정책의 기본 방향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그들이 농업·농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귀농·귀촌인에 대한 개별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창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귀농·귀촌인 개인에게 현금 보조 또는 용자 등의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방식만으로는 귀농·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이 농업·농촌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귀농·귀촌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귀농·귀촌이라는 사회 현상은 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또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어 귀농인 또는 귀촌인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보다는, 정책 수혜의 기회만을 찾게 만드는 경향도 있다.

둘째, 귀농·귀촌 인구 증대 자체가 아니라 농촌에 활력을 일으킬 인적 자원, 특히 젊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귀농인 및 귀촌인의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의 종류와 수준 등에 따라서 귀농·귀촌은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동반 가구원 수가 많고, 경제·사회 활동 잠재력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농촌에서 현저하게 소수인 청년층을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 젊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단순히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부문에의 신규 진입과 귀농·귀촌 가구 구성원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신규 취농자, 특히 젊은 귀농인에게 농업 진입 장벽은 높은 편이다. 영농기술 및 경험, 자본(토지, 자금), 이주 초기 생계를 영위할 현금 소득, 사회적 관계 등이 주요 난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귀농 가구 대부분은 농업 소득만으로 가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농업과 연계된 겸업 소득,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등에서 사업 외 소득을 얻도록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

넷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는 개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

는 방식 일변도를 벗어나 정책을 추진할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현재 농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대부분 정책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단순 상담 창구로 기능할 뿐이다.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구’로서 기능은 미비하다. 귀농·귀촌인 및 토박이 주민이 어울려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모색하게 할 ‘열린 장소’가 없는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과 과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칠 의사소통 장치와 실행 조직이 미비하다.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었지만, 귀농인 개인들에게 자금 지원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조항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 고 문 헌

1. 고성준. (2008).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 전라북도 귀농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정섭. (2014).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함의. *농촌지도와 개발*, 21(3), 53-89.
3. 김정섭. (2015). 청년 귀농 정책의 방향. *경상북도 2015 귀농·귀촌 활성화 포럼 자료집*. 경상북도.
4. 김정섭, 임지은, & 박천수. (2012).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2: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김정섭, 김경덕, & 임지은. (2015).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김정섭, 엄진영, & 유찬희. (2016). 일자리 없는 농촌, 할 일 많은 농촌 - 농촌 지역의 고용 실태와 정책 방향. *농업전망 2016 -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 (pp.353-376).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김정섭, & 김종인. (2016).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23(2), 115-122.
8. 김한중. (2016). 도농간 인구이동 현황과 시사점. *농촌지역 인구문제 세미나 자료집*. 전주: 전북연구원.
9. 농림축산식품부. (2014). *지난 해 귀농·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보도자료.
10.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해양수산부. (2016). *2015년 귀농·귀촌인 통계*. 보도자료.

11. 농촌진흥청. (2016). *주말농장 참여 후 농업·농촌 이해도 높아졌어요*. 보도자료(4월 12일자).
12. 서규선 · 변재면. (2000). U턴 귀농자 장 · 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13. 성주인, 임진영, 박유진, & 정규형. (2014). *농촌의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성주인, & 채중현. (2012).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송미령, 김정섭, & 박주영. (2009). 농어촌 기초생활권의 전망과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09(I) - 한국 농업 · 농촌 도전과 새로운 희망* (pp. 423-449).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우성호, & 이성근. (2015). 귀농 · 귀촌의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2(2), 101-116.
17. 이민수, 박덕병. (2012). 도시민의 귀촌형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1137-1170.
18. 장민기, 이준우, 허재욱, 김혜민, 채상헌, 김기현, & 송기선. (2014). *귀농 · 귀촌 인구 정착실태 및 관련 정책 발전 방안*.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19. 채중현, 박주영, & 김정섭. (2007). 농촌 지역의 인구 변화와 3차산업 분포. *농촌경제*, 30(1), 109-127.
20. 통계청. (2012). *2011년 국내인구이동 통계: 최근 1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보도자료.
21. Bock, B. (2016). Rural marginalisation and the role of social innovation; A turn towards nexogenous development and rural reconnection. *Sociologia Ruralis*, 56(4), 552-573.
22. Falanigan, S., & Sutherland, L. (2016). Buying access to social capital? From collaboration to service provision in an agricultural co-operative. *Sociologia Ruralis*, 56(4), 471-490.
23. Halfacree, K., & Rivera, M. (2012). Moving to the countryside and staying: Lives beyond representations. *Sociologia Ruralis*, 52(1), 92-114.
24. Hodge, I., & Whitby, M.(1981), *Rural employment: Trends, options, choices*, London: Methuen.
25. Sorensen, D. (1977). Reverse migration and th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blem. *Wester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1), 49-5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http://kosis.kr/>).

통계청. 농림어업조사(<http://kosis.kr/>).

통계청. 인구총조사(<http://kosis.kr/>).

통계청. 전국지가변동률조사(<http://kosis.kr/>).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http://www.bigkinds.or.kr>).

Received 15 February 2017; Revised 05 March 2017; Accepted 22 March 2017



Dr. Jeongseop Kim is a Senior Research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Research in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outh Korea. His fields of interest are rural development issues.
Address: (58217) 601, Bitgaram-ro, Naj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e-mail) jskkjs@krei.re.kr



Dr. Jongin Kim is a Research Fellow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Research in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outh Korea. His fields of interest are agricultural economics, rice industry, direct payment system issues.
Address: (58217) 601, Bitgaram-ro, Naj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e-mail) jongin@krei.re.kr